

영리병원 도입, 의료비가 폭등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4.11 총선직후인 4월 17일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과시키면 법적으로는 전국의 6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1.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병원입니다.

영리병원은 돈벌이병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비영리병원’ 만 있습니다. 비영리병원은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주주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돈을 벌기위한 기업입니다. 당연히 의료비가 비쌉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영리병원이 많은 미국은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의료비가 20% 비쌉니다. 정부 연구원인 보건산업진흥원조차 현재 국내 개인병원 중 20%가 영리병원으로 바뀌면 연 1조 5천억원의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더욱이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을 안받아주는 병원입니다. 또 600병상 모두 1인실입니다. 망장염 1000만원이 더이상은 미국이야기가 아닙니다.

2. 영리병원은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으로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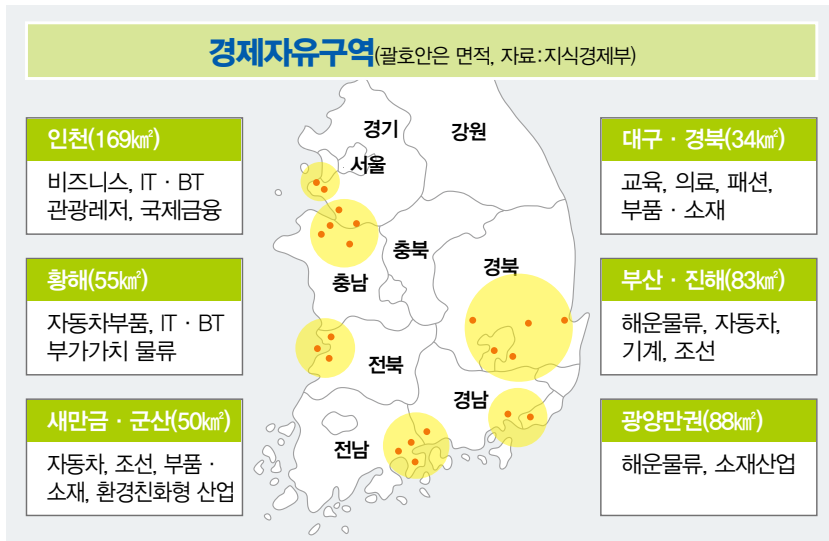


병원의 인건비는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매출액의 50%정도를 차지합니다. 돈을 벌려면 인건비를 줄여야 합니다. 임금을 삭감하거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아예 일자리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영리병원은 특히 간호직을 대폭 줄여 돈을 벌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고를 보면 미국에서 비영리 병원은 100명당 522명을 고용하지만 영리병원은 352명만 고용했습니다. 또 줄어든 일자리마저도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일자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안되는 응급실과 같은 의료서비스는 안합니다. 1회사용장비를 여러번 사용합

니다. 결만 화려하지 서비스 질도 떨어져 미국에서는 영리병원 때문에 연 1만 2천여명이 더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3.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은 경제자유구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 영리병원 하나를 짓는것 이므로 큰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제자유 구역은 인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있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도 같이 취급됩니다. 인천, 대구, 부산 을 포함해 전국의 18개 도시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전국 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병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다른 지역의 병원들이 차별이라고 영리병원 전면허용을 주장하 게 됩니다. 이미 병원협회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상 전국적 영리 병원 허용의 시작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전국 지역병원 50개가 문을 닫게 된다고 보고했

습니다. 지금도 심각한 의료의 지역적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4. 한미FTA로 설립된 영리병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의료민영화의 시작입니다.

한미FTA에 보건의료서비스는 예외로 해놓았다고 정부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영 리병원은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번 허용된 영리병원은 역진방지조항(ratchet) 때문 에 폐쇄하거나 비영리병원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을 더 늘리면 그것또한 역진 방지조항에 걸리게 되어 앞으로 영리병원 허용지역은 늘릴 수만 있고 줄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 서 애초에 영리병원을 짓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5. 재벌들을 위한 영리병원, 의료민영화를 막아야만 합니다.

지금 인천에 짓는 영리병원은 처음에는 외국병원이고 외국인 환자만 진료한다고 세우기로 했었 습니다. 그러나 법을 여러차례 바꾸어 지금은 삼성과 KT&G가 40%의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습 니다. 또 외국인 환자만이 아니라 국내환자 중심입니다. 외국인 의료진도 전체 의료진의 10%만 되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내영리병원입니다.

누구를 위한 병원입니까? 의료비는 폭등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의료 서비스질 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오직 국내재벌들과 부자들을 위한 병원일 뿐입니다. 지금도 물가고에 시 달리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재앙일 뿐입니다. 총선 직후 이명박 정부는 총 선결과가 자신들에게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듯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KTX 민영화, 의료민영화,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보류 등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폭주, 노동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막아야 합니다.

